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지명 ...여야, 원 구성 '대치'

법사 정청래·운영 박찬대·과방 최민희·행안 신정훈 의원 등 국힘 "법사·운영위원장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 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임하며 개원 초반부터 여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장 후보로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을 지정하는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본

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의 의장이 맡았기 때문에 법사위는 제2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운영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집권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사·운영위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7곳 상임위 위원장을 21대 후반기처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 제대로 된 원 구성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처리를 시도한다면 표결에 불참할 방침이다. 민주당 단독 처리 시 향후 7개 상임위 배분 협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는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을 의원들과 논의한다.

앞서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에 대비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에는 10일 본회의가 열리면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단독으로 선출하지는 의견도 있지만, 자당 몫으로 선정한 11개 위원장부터 먼저 선출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우 의장 역시 상임위원장 18명을 한 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11개 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상임위원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재선의 최민희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이상 3선)을 추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9년6개월 선고 ... 여야 거센 공방

국힘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민주 "검찰 조작수사 역사의 심판 받아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을 그를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역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재판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등을 쌍방을 대신 북한 측 인사에 지급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주장을 채택한 재판부 판결에 납득이 어렵다면서 검찰에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그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두고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검찰도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

사,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기대한다"며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 등의 진술 반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을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았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또 "권력과 아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은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을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과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쌍방을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남 교정에 관여했는지의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허용 추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당헌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오는 10일 최

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의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애초 당에서 추진하던 당헌 개정안이 '이재명 연임 맞춤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도부가 나름의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권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하려 했다.

'대통령 권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

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그 취지였다.

이런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는 강하게 반대 뜻을 표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는 결국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헌 개정에는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재고를 건의했고, 이들은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권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사용안내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1)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지원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5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완료 필요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1)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2)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3)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국민행복카드도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